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

2024. 1. 24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II. 추진방안 | 2 |
| 1.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 편의 개선 | 2 |
| 2. 투자자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| 3 |
| 3. 규제 합리화 | 4 |
| III. 향후 계획 | 6 |

I. 추진배경

- **(제도 취지)** 금융위는 대부업과 연계하여 영위되던 'P2P대출'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('17.2월) 후, 온투법 제정('20.8월 시행)
 -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 등 투자자·차입자 보호 제도와 영업행위 규제·감독 체계 마련
 - ※ [개념]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業 (이하, '온투업'으로 적시)
- **(업권 현황)** 등록 온투업체 52개사, 이용자 수 약 10만명 * '23.9월말 기준
 - 연계대출 잔액은 총 1.1조원
 - * [대출잔액, 조원] '21년 (1.1), '22년 (1.3), '23.9월 (1.1)
 - 온투업권에서 중개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'23.9월말 기준 차입자의 80% 이상이 舊 신용등급(CB사 기준) 4등급 이하이고, 대출금리 평균 10~15%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
 -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,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,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
- **(지난해 규제개선 추진)**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①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 (3→4천만원)
 - ②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인하 (0.24→0.164%)
 - ③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

⇒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중·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방안 추진

Ⅱ. 추진 방안

1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 편의 개선

< 연계투자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허용 >

* 온투법상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

- **(현행)** 연계투자상품은 타 플랫폼에서 비교·추천이 불가능*하여 연계투자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온투업자 플랫폼 접속후 조회 필요

* ① [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]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
② [금융소비자보호법] 온투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 등록 제도 미비
③ [신용정보업 감독규정] 금소법상 등록제도 미비로 마이데이터사업자 겸영업무 영위 불가

- **(개선)** 금융상품 비교·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·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*를 통해 허용 추진

* ① [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] 온투업자의 모집업무 위탁 허용
② [금융소비자보호법] 특례 적용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 가능
③ [신용정보업 감독규정] 겸영업무 사전신고 면제

⇒ 투자자는 효율적인 투자,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지고, 온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한 상품 다양화,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

☞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('24년 1분기)

<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>

- **(현행)**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방식의 '자동분산거래' 금지*

* ①차입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투업 정의에 위배, ②2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일상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소지

- 온투업계는 소액투자로 이뤄지는 온투업권 특성상 연계투자가 계속적·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분산거래방식 허용 희망

- **(개선)**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*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 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하는 '예약거래**'를 허용

* ①온투법상 특정 차입자 투자 방식 취지에 맞게 투자자가 투자분야, 금액 등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하고, ②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상품 결정

** (투자자) 투자조건 설정, 기본계약 체결, 예치금 입금 → (온투업자) 투자조건에 맞는 상품정보 제공, 분산투자 실행 → (투자자) 상품 확인, 투자철회 가능

⇒ 투자자는 여러상품을 분산해 투자 리스크를 감소하고,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른 상품정보 제공으로 투자편의 제고

☞ 온투법 예약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('24년 상반기)

2 투자자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

<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>

- **(현행)** 온투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,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곤란*한 상황

* 금융기관의 대출심사, 건전성 규제, 추심 등의 대출규제 적용상의 제도적 충돌

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>

제35조(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)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.

- **(개선)** '온투법권-금융기관-차입자'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소 추진

⇒ [온투법권]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로 업계의 안정적 발전기반 마련
[금융기관]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및 건전성 관리 개선 가능
[차입자] 금리 등 대출조건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 가능

☞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('24년중)

<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>

□ **(현행)**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(소득 1억원 이상은 2천만원)까지만 투자가 가능

- 공기업 연관 지역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에는 투자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자 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기회*가 제한됨

*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제공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높은 수익이 제공됨

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>

제27조(대출한도 및 투자한도)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(중략)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
 - 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: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 - 나.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: 5백만원

□ **(개선)** 개인투자자가 「민간투자법」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*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(기존 5백만원)으로 확대

* 국가·지자체·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%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

⇒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마련, 차입자는 사업자금 조달 및 지역 수용성 문제 해결 가능

☞ 온투법 시행령 제27조 개정 ('24년 상반기)

3 규제 합리화

< 공시기간 합리화 >

□ **(현행)** 온투업권 상품 중 자산담보대출은 사전 공시기간(24시간)이 길어서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 발생

* [공시기간] PF상품(48시간), 어음·매출채권(1시간), 그 외 상품(24시간)

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>

제23조(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)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"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: **48시간**
2.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가. 어음·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: **1시간**
나.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: 24시간

□ **(개선)** 자산담보*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 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(현 24시간)을 축소

* 주식,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가능

⇒ 자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 가능, 투자자의 투자편의 제고

☞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 ('24년 상반기)

<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>

□ **(현행)** 대출의 '주선'은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융회사를 연계 해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
* 대출의 '중개'는 금융회사의 요청을 따르는 것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 가능

-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수수료 수취 불가로 소기업 자금수요 주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

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>

제14조(겸영업무)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.(중략)

2. 수수료, 사례금,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 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

□ **(개선)**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

⇒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기업 등의 차입 기회 증대

☞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 ('24년 상반기)

Ⅲ. 향후 계획

□ '24년 온투업권 규제개선 과제 추진 일정

| 구 분 | 추진 내용 | 일 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연계투자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허용 |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| '24.1분기 |
| ②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| 가이드라인 마련 | '24.상반기 |
| ③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|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| '24년중 |
| ④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| 시행령 개정 | '24.상반기 |
| ⑤ 공시기간 합리화 | 감독규정 개정 | '24.상반기 |
| ⑥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| 감독규정 개정 | '24.상반기 |

- ◆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('22.12.)에서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“온투업 활성화” 과제(4개)중 3개 과제를 추진 완료

< 온투업권 영업활성화 추진 과제 >

| 온투업권 애로 사항 | 추진 과제 | 추진 상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낮은 투자한도로 개인 수익 규모가 낮음 | ①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규모 확대 | 완료 |
| 순수익률 대비 수수료 부담이 과도 | ② 금결원 수수료 절감 | 완료 |
|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시 온투법 저촉 우려 | ③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| 완료 |
|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제공 필요 | ④ 기관투자 애로 해소 ① 개인식별정보 제공 허용 | 완료 |
| 저축은행 등 업권법 적용 가이드라인 필요 | ② 대출규제 관련 | 계획 변경 |

< 상세 추진 내용 >

- ①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규모 확대 : 추진 완료 ('23.6월 감독규정 개정)

-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(3→4천만원)하고,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(부동산PF대출, 부동산담보대출)를 상향(1→2천만원)*

* 다만,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

- ② 중앙기록관리업무* 이용수수료 체계 개편 : 추진 완료 ('23.8월말 합의 체결)

* 온투법에 따라 금결원이 온투업 계약기록·투자자 한도 등을 관리

- 이용수수료를 인하(0.24→0.164%), 수수료 공제(연 50만원) 신설 (→24.1월부터 시행)

- ③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: 추진 완료 ('23.3월 유권해석 완료)

-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는 온투법*상 '투자자 모집 업무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

* 온투법은 '투자모집 업무의 위탁'을 금지하고 있는데,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④ 기관투자 애로 해소 : 일부 완료 ('23.4월 유권해석 완료)

-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 필요

→ '온투업자의 금융회사 개인식별정보 제공'에 대한 유권해석*

* 금융회사에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게 온투법상 투자자 차별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